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

민주 이성운 의원 “헌재에 위헌심판청구로 제소… 헌법 11조·122조 위반”
전북 국회의원들과 개정안 발의 22대 국회 통과 목표… 전북의 자존감 회복
전주를 지역구 내 전북자치도의원 · 전주시의원들도 참석해 동참의지 피력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원 5명(김이재·김희수·이병철·장연국·최형열 의원)과 전주시의원 4명(김성규·전은미·정성걸·최명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대광법’이 위헌이라고 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로 제소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광법’은 대도시교통생활권을 연결하여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데, 이 법이

전북만 차별하고 있어 헌법 11조와 122조에 위배돼 위헌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북과 강원도는 100만명 이상의 광역도시가 없어 국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법은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되고, 지역균형발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 12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는 ‘대광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시에 무려 6조8,000억원이라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어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에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제외되어 ‘대광법’에 의해 양파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하게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북만 ‘교통오지’가 되어 버렸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이 1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원들과 전주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광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 ‘부익부 빈익빈’

전국 정비율 46.5%… 광주 11.5% · 인천 31.9% · 전북 34.4%
민주 한병도 의원 “2026년 이후 재원 마련 방안 준비해야”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별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커지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 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2,109개소(총연장 5만 5,679km)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

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 정비사업 예산의 지방 이양이 추진된 이후 3년간 소하천 정비 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 572억원 △경북 528억원 △경기 388억원 △전남 323억원 △강원 264억

원 순이었다.

연도별 피해 규모는 △2018년 113억원 △2019년 180억원이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2020년 1,474억원으로 폭증, △2022년에는 90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익산=이재훈 기자

과로사·과로성 질환 전국가적으로 예방, 관리 체계화

민주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이 11일,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하는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자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국가 등의 책무·국민과 사용자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과로사 등의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과로사 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으며, 과로사 등 예방 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과로사 등 예방대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호 기자 · 정읍=김태환 기자

질타했다.

또한, “낙후된 교통망으로 지역 경제까지 피해를 받아 전북은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최하위, 주요 광역권 중 인구감소를 1위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전북은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스러운 전북발전의 현실에 정부에서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며,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우리 헌법은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선언하고 있으므로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이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반드시 이를 통해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리고 동시에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상처받은 전북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참석한 도의원들과 시의원이 모두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대광법’ 개정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의 질의토론을 통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여 반드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전북 뉘를 찾고, 자신과 사법고시 동기이자 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한 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장 뜨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에 열린다.

현재 최고위원에 13명이 출마, 7월 14일 예비경선에서 8명으로 압축해 전당대회에서 5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尹 탄핵 국민동의청원 참여 호소’

이상길 정읍시의원, 충경로 사거리서 피켓팅 진행
“민주주의·법치주의 지키기 위한 국민 목소리”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시기, 초산, 상교)은 지난 10일과 11일 오전, 충경로 사거리에서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에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상길 의원이 독려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으로 대통령의 체면보장 사건의 위압 행사, 영부인 일가의 부정부리,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상길 의원은 “이번 청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라며, “모든 시민이 이 중요한 순간에 함께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덧붙여 “이번 국민동의청원 동의를 마감할 때까지 피켓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계속해서 불거지는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응분의 책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청원 성립 요건을 만족해 해당 상임위에 회부 되었으며, 1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38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정읍=김태환 기자



도, 국비 확보 기재부 설득 전력

예산 확보에 지휘부가 앞장
최병관 부지사, 기재부 찾아
전북 주요 현안 반영 건의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재부의 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북자치도를 변화시키고,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 갈 사업들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도는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기재부가 제기한 쟁점사항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휘부가 앞장서 본격적인 기재부 설득 활동에 나선 것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11일 기재부 예산실 주요 과장들을 직접 만나 새만금, 교보, 문화, 환경, 안전 등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하였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었다.

먼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건의하였고

호남선, 호남고속선, 전라선, 장항선의 교차역으로 KTX, SRT, ITX-새마을, 무궁화호가 필수 정착하는 호남중심역인 익산역의 이용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북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문화생태계 구축 사업들도 다수 건의했다.

△국립모두에슬콤플렉스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사업과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조성 △전주부성 복원 정비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세계명경 테마랜드 조성 사업 △국립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의 사업도 정부안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폐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 확보를 위해 △원주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김제시 우분연료화시설 △부안군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과 폐기물 매립 공간을 확보하는 △남원시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안전한 전북자치도 구축을 위한 △상습침수지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상습침수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상습침수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과 재활환자의 치료 환경개선을 위해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지원을 요청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올해도 세수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속에 국가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다”고 하면서 “정부의 투자방향에 맞게 사업 논리를 보강하여 부처 안에 반영된 사업은 지키고, 포함되지 못한 사업은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하반기 원구성 후 11일 본회의장에서 전주기린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청소년 모의의회를 열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제4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전주기린중학교 2~3학년 20명의 학생들이

이 참여하여,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건의안 발의’, ‘토론’, ‘투표’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이명연 부의장(전주 10)은 학생들에게 “오늘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우고 상호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환영인사를 전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해 경청하고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